연구논문

반일과 **역사 화해**

김봉진

* **지은이** | **김봉진**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외교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도쿄대학 총합문화연구과 국제관계론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중일 3국의 정치사상사, 비교정치사상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東アジア「開明」知識人の思惟空間 : 鄭觀應 · 福澤諭吉 · 兪吉濬の比較研究』, 공저로는 『동아시아 전통지역질서』, 『한류와 한사상』, 『한국병합과 현대 역사적 국제법적 검토』 등이 있다. 현재 기타큐슈(北九州) 시립대학 국제관계학과에 재직 중이다.

1. 머리말

한일 양국(이하, 양국) 간에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 특히 근대 일본의 식민주의 역사에 기인하는 문제가 세기를 넘어 지금껏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 역사문제는 두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불행한 역사와 그 기억에 의한 문제, 또 하나는 과거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역사인식을 둘러싼 문제. 이를 둘러싼 양국 간 비대칭성이 반일과 혐한(嫌韓)의 적대적 공범관계를 재생산해 왔다. 그 요인은 물론 역사문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양국 간의 정치·외교·경제·문화 부문의 마찰도 있으며,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나 재일동포 등의 문제도 있다. 그러나 근본 요인은 무엇보다 역사문제에 있다.

역사문제의 존재는 일본의 전후(戰後) 처리가 모자람에 기인한다. 그 배경에는 '전후'에 형성된 동아시아의 냉전과 분단 구조가 있다. 그 밑에서 일본의 전후 처리는 미국이 주도했고 한국을 비롯한 '중요한 타자'가 소외된 채 어중간하게 끝났던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의 가해자로서의 자기반성과 책임의식은 왜소화되었다. 동시에 한국 등 타자와의 역사 극복과 화해는 뒤로 미루어졌다. 그리하여 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는 '과거의 망령'이 배회하는 한편 '과거를 인질로 삼은 현재'가 계승되었다.

전후 일본은 동아시아의 냉전과 분단의 은혜를 입은 셈이다. 실제로 일본인 가운데는 이를 행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수혜의식은 일본인을 대미의존과 함께 '미국에 취한 상태'(アメリカ惚け)에 빠지게 만들었다. 또한

냉전사고와 분단에 대한 책임 회피에도 빠지게 만들었다. 심지어 냉전과 분단의 지속을 바라는 어긋난 심리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전후 일본에서도 '전쟁 책임'은 끊임없이 제창되었고 이에 대한 자기반성도 상당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 책임'은 근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인식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거의 식민주의나 '제국의식'의 잔재가 온존/재편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1] 또한 근대주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이원(二元)사고나 이항대립사고, 일본형 오리엔탈리즘, 자기/자국중심주의도 온존/재편되었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전후 일본의 보수 내셔널리즘이다. 주의할 것은 한국도 과거의 근대화 실험과 식민지 경험, 그리고 해방 후의 근대화 등 일련의 과정에서 근대주의, 오리엔탈리즘, 자기/자국중심주의를 육성해 왔다는 점이다. 그 일각에 반일 내셔널리즘이 동거한다.

그런 뜻에서 한국도 일본도 근대에 주박(呪縛)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대의 주박을 초극(超克)하는 일은 한일 공통의 사상과제이다.[2] 거기엔 필연적으로 근대문명에 대한 비판/성찰이란 과제가 따른다. 동시에 전통문명에 대한 비판/성찰이란 과제도 따른다. 여기서 문명이란 그 바탕이 되는 물질과 정신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때 정신이란 사상과 제도, 인식과 언설은 물론 사고양식, 인간관, 가치관, 문명관 등을 뜻한다.[3]

그런데 1990년대부터 한일 간 역사문제가 역사교과서, 종군위안부, 강제노동 등 구체적 현안을 통하여 간헐적으로 분출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도 완만하긴 하나 식민지지배 책임에 관한 인식이 진전되어 왔다. 새로운 인식은 호소카와(細川) 총리 담화(1993년), 무라야마(村山) 총리 담화(1995년), 한일공동선언(1998년), 북일평양선언(2002년) 등에서 표명되었다. 특히 무라야마 담화는 식

1) 근대 일본의 식민주의의 형성과 변용, 그리고 전후 일본에 계속되는 식민주의에 관해서는 小森陽一, 『ポストコロニアル』, 東京 : 岩波書店, 2001[송태욱 옮김, 『포스트콜로니얼 : 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 의식』, 삼인, 2002] 참조. 또한 岩崎稔·大川正彦·中野敏男·李孝徳 編著, 『継続する植民地主義 : ジェンダー/民族/人種/階級』, 東京 : 青弓社, 2006 참조.

2) 이에 대한 분석 고찰은 金鳳珍, 「韓日共通の思想課題」(『翰林日本学』 제14집, 2009년 4월, 한림대학교 일본연구소) 참조.

3) 이하, 근대문명을 근대로, 전통문명을 전통으로 줄이는 경우도 있다.

민지지배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죄한 획기적 선언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죄에 따라야 할 역사 극복과 화해에의 행동/실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0년은 '한국병합' 100주년. 이 획기년을 맞이하여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을 직시하고자 "병합 과정도 병합 조약도 불의 부당"함을 선언한 '한일지식인 공동성명'이 5월 10일에 발표되었다. 그 배경에는 2009년 9월에 이루어진 일본 민주당 정권의 성립이 있었다. 민주당 정권은 역사 극복과 화해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취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것이다. 이에 응답하는 뜻에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8월 10일, "식민지 지배"에 대해 "다시금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4)]

간 담화는 기본적으로 무라야마 담화의 연장선상에 있으나 보다 명확한 타자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먼저 식민지 지배가 "당시 한국인의 뜻에 반하여 행해졌다"고 명언함으로써 그 강제성을 인정했다. 다음으로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이를 받아들이는 겸허함을 가지고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는 일에 솔직하고 싶다", "아픔을 준 쪽은 잊기 쉽고 받은 쪽은 쉽게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엔 과거의 역사를 스스로 비판/성찰하려는 결의와 식민지 지배 책임의 망각을 뉘우치는 도덕적 감수성이 투영되어 있다. 나아가 역사 극복과 화해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일본 정부가 솔선하여 취할 것이라는 전향적 의지도 투영되어 있다. 그 의지를 실천하려는 하나의 예로서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 유래의 귀중 도서를 "반환"[お渡し]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간 담화는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며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그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는 다음과 같다. 양국은 "민

4) 간 담화에 관해서는 한국정부도 "미래의 밝은 관계를 열고자 하는 의지"로 평가하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8월 10일 담화와 관련된 간 총리의 전화에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어떤 행동으로 실천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11일자 한국 주요 신문의 조간은 간 담화를 일면 톱 기사로 다루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은 사설에서 "역대의 담화보다도 일보 전진한 역사인식"이라 평가한 다음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 평양방송은 8월 10일, '한국병합' 100주년에 즈음한 논설에서 "일본은 하루 빨리 과거의 범죄를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중국 신화사통신은 "역사 화해는 행동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간 정권의 금후 조치를 주시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주주의나 자유, 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한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으로부터 "지구 규모의 과제"에 이르기까지 "협력하여 리더십을 발휘할 파트너 관계"라는 것이다. 이같이 원대한 구상하에 간 담화는 "양국 간의 미래를 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다.

과연 양국은 반일과 혐한의 적대적인 공범관계를 타파하고 장래세대에게는 과거의 망령과 과거를 인질로 삼은 현재를 계승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유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근대의 주박을 초극하면서 역사 화해의 지평을 열어 나갈 수 있을까?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이하 반일과 역사 화해라는 문제를 재고하고자 한다.

2. 반일의 진정성

반일은 '잊을 수 없는 타자' 일본(인)에 대한 불신과 증오 감정에서 생긴 성향이라 풀이된다.[5] 그러나 이는 반일의 겉만 보고 풀이한 것이다. 실은 그 속엔 양의적이자 모순된 성향과 함께 일본을 향한 욕망과 조리(條理)가 담겨 있다. 그 욕망의 기본은 타자와의 대화이다. 이를 통해 일본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풀고 싶은 것이다. 따라서 거기엔 어느 정도 일본을 향한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다. 이런 뜻에서 반일은 타자 일본에 대한 신뢰/불신과 애증의 양면감정에서 생긴 성향이라 풀이해야 옳다.

한편 반일 속에 담긴 조리의 바탕은 도리(道理)에 있다. 그것은 자타 공통의 보편적 도리를 지향한다. 이 도리지향성은 타자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풀고 자타 상호 간의 신뢰와 애정을 잇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어진다. 요컨대 반일은 하나의 말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자타의 상호연관에서 생기고 변화해 가는 '동태'(動態)인 셈이다. 따라서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선

5) 한국인의 반일 감정은 뿌리 깊고 그 역사도 길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앞에서 말한 역사 문제에 기인한다.

(禪)문답처럼 반일의 말뜻을 좇지 말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욕망과 조리를 보아야 한다.

그런데 반일은 크게 두 범주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일본 부정'의 반일. 이는 오직 일본의 부정적 요소나 가해성을 문제삼은 채 불신과 증오의 고통을 감내(堪耐)하는 반일이다. 그 속에도 어느 정도 욕망과 조리는 담겨 있다. 그러나 그 욕망과 조리는 일방적인 탓에 자기모순을 동반한다. 이를테면 반일의 상대인 일본을 부정함으로써 타자부재에 빠지고 만다. 따라서 자타의 커뮤니케이션을 잃은 채 응답 없는 반일을 거듭해야만 한다. 그 결과 불신과 증오의 고통은 증폭될 뿐이다.

다른 하나는 '일본 긍정'의 반일. 정확히 말하면 '부분긍정과 부분부정'에 바탕을 둔 반일이다. 이는 일본의 부정적 요소나 가해성을 문제 삼지만 동시에 긍정적 요소도 평가하고 피해성도 이해한다. 또한 일본의 도리지향성을 믿고 그것이 타자에게도 향할 것을 바란다. 거기엔 일본을 용서하고 나아가 역사 극복과 화해의 지평을 열고자 하는 욕망과 조리가 담겨 있다. 그런 뜻에서 일종의 친일을 내포한다. 무릇 반일과 친일의 거리는 의외로 가깝고 그 사이의 회색지대도 넓은 셈이다.[6]

물론 '일본 부정'의 반일은 오늘날 한국에서도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한다. 박유하는 그 모습을 예시하면서 한국인의 반일(감정, 내셔널리즘)을 비판적으로 해독한 다음 그 결론부에서 "일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면 비판함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 한 번쯤 되새겨야 한다"[7]라고 말한다. 나아가 박유하는 "인간은 타자의 다름을 단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고 싶어 한다"면서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받아

6) 나는 반일과 친일이라는 이항대립 도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면 '반일 속의 친일'이나 '친일 속의 반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반일과 친일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고 본다. 반일은 '일본부정'이든 '일본긍정'이든 거기에 '일본이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이런 점에서 친일의 대립 개념은 '일본은 없다'. 즉 일본 무시를 뜻하는 '무일'(無日)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7) 朴裕河, 『反日ナショナリズムを超えて : 韓国人の反日感情を読み解く』, 安宇植 訳, 東京 : 河出書房新社, 2005, 241쪽.

들이는 열린 마음"이라고 말한다. 지당한 말이나 다음과 같은 이견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인은 '일본인의 문제'를 비판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문제'도 비판한다. 또 '타자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도 지니고 있다. 단 일본의 '받아들일 수 없는 다름'을 배척할 뿐이다. 그렇지만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진 않는다. 이미 한국에선 '일본 긍정'의 반일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일본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지니고 있다. 다만 일본의 부정적 요소를 문제 삼고 반일할 뿐이다.[8] 나아가 역사 극복과 화해의 지평을 열고 싶기 때문에 반일하는 것이다.

반일의 '반'(反)은 '일본 부정'에만 회수될 수 없다. 그리고 '일'(日)은 '일본 전체'가 아니다. 그것은 과거 일본의, 그리고 현재 계속되는 식민주의를 뜻한다. 또 이로 말미암은 과거의 망령과 근대의 주박에 걸린 내셔널리즘, 그리고 지금껏 잔존하는 제국의식을 뜻한다. 나아가 그 배후에 있는 일본 전통의 부정적 요소와 그 전승, 격세유전(隔世遺傳)을 뜻한다. 요컨대 반일의 '일'이란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역사문제에 연관된 일본의 부(負)의 유산을 표상한다. 이에 대한 비판/성찰을 촉구하는 일이야말로 반일의 진정성이다.

3. 반일과의 대화

반일의 궁극 목표는 반일의 내파(內破)에 있다. '반일의 내파를 위한 반일'이란 마치 모순어법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반일의 본질이자 존재이유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반일은 타자 일본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풀고 싶은 욕망을 담고 있다. 즉 반일 자체를 내파하고자 하는 욕망을 담고 있는 셈이다. 그 내파를 위해 반일은 타자 일본과의 대화를 욕망한다. 또한 반일 속에 담긴 조리는 자타 공통의

8) 실은 박유하도 그 한 사람이다. 예컨대 교과서, 종군위안부, 야스쿠니(靖國), 독도 등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자세를 비판(=반일)한다. 朴裕河, 『和解のために : 教科書·慰安婦·靖国·独島』, 佐藤久 訳, 東京 : 平凡社, 2006.

도리를 지향하며, 이는 결국 반일의 내파로 이어진다.

따라서 일본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고 단순하다. 반일을 문제가 아닌 기회로 삼아 그것과 대화하는 일이 그것이다. 여기서 대화란 반일 속의 욕망과 조리에 응답하면서 양국 공통의 도리를 함께 지향함을 뜻한다. 이로써 일본이 자신의 부를 비판/성찰해 나간다면 반일은 내파되어 오히려 역사 극복과 화해의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반일은 '기회'인 것이다. 이때 '일본 부정'의 반일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대화하면 된다. 그 대신 '일본 긍정'의 반일과는 성의 있게 대화해야 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먼저 반일의 근원은 과거 일본의 식민주의와 식민지 지배,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는 언동이나 인식/언설에 있다. 따라서 반일이 자체의 내파를 욕망하고 있을지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촉매(觸媒)로서 일본의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이때 과거의 망령이나 근대의 주박은 망각(忘却)으로는 풀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망각을 없앰', 즉 비(非)망각에 의해서만 풀 수 있는 것이다.[9]

다음으로 반일의 양면감정을 분별함과 함께 그 도리(지향)성을 이해하는 일이다. 그 도리성은 한마디로 '인도(人道)에 반한 죄'를 바로잡는 성향이다. 그것은 또한 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는 '복수(復讐) 부정'의 의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반일은 역설적으로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는 주부(呪符)가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반일의 도리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양국 공통의 도덕적 공명반(共鳴盤)을 발명해 나갈 필요가 있다.[10]

셋째로 양국 각각의 과거와 그 기억을 둘러싼 거짓과 허상, 그리고 서로의 무지와 무관심을 부숴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 일종의 판단정지(epoché), 서로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 역사연구의 문제점을 두 가지

9) '망각을 없앰'이란 그리스어로 아레테(a-Lethe), 즉 '망각, 감춤'을 뜻하는 레테를 부정(접두어 a)함을 가리킨다. 이로부터 '비망각, 드러냄' 즉 '진리, 진실'을 뜻하는 아레테이아(a-lethe-ia)라는 말이 파생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레테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말로서 저승[黃泉]에 흐르는 여러 강의 하나이다. 이 강물을 마신 사람은 완벽한 망각을 체험하게 된다고 한다.

10) 이를 위해 양국 사상(사)의 비교연구가 치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공명반'을 발명하려면 양국 사상의 공통성과 이질성을 제대로 해석하고 올바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 지적해 두고 싶다. 하나는 일국사관 또는 자국중심사관이다. 양국 관계사는 일국/자국을 넘어선 지역사의 관점을 지닐 때 비로소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역사 실증주의이다. 이것이 종종 실증주의의 오류(fallacy of positivism)나 '나무를 볼 뿐 숲을 못 봄'에 빠지기 때문이다. 특히 양국의 근대 관계사에 관련된 일본 측 사료/자료는 실증보다는 오히려 비판적 해석의 대상일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생성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자기와 타자는 서로의 위치를 알고 자신을 형체화할 수 있다. 대화 이전의 양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존재조차 없다. 양자는 대화할 때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대화하면서 서로 배우며, 대화하지 않은 것마저 배운다. 나아가 자기이자 타자인 타아(他我)를 경험한다. 또는 자기도 타자도 아닌 제3자를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한일 공통의 역사인식을 이끌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해 나간다면 반일은 내파되어 갈 것이다. 이 과정이 곧 역사 화해이다.

4. 역사 화해의 말뜻

역사 화해란 가해국과 피해국이 역사 극복의 도정(道程)을 함께 걷는 과정이다.[11] 이 과정은 한없이 이어진 레일과 같다. 따라서 '화해'를 간단히 입에 담아선 안 된다. 그것은 단 한 번의 과정이거나 단숨에 도달할 수 있는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 걸음만 내디디면 역사 화해의 레일을 타고 그 역사 극복의 도정을 즐길 수 있다.

역사 화해는 행동/실천이다. 정확히 말하면 가해국과 피해국이 함께하는 행동/실천이다. 따라서 가해국의 사죄만으로 끝날 리가 없다. 사죄는 화해의 발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피해국의 말이나 마음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사죄는 화해의 발단은커녕 사죄로 성립되지도 못한다. 사죄는 가해국이 과

11) 이하, '역사 화해'를 '화해'로 줄여 쓰기도 한다.

거에 범한 죄에 대한 책임(guilt)을 직시하고, 피해국에 대한 현재의 응답책임(responsibility)을 다함으로써 그 용서를 받고 나서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사죄가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선 서로의 마음과 뜻을 화해할 행동/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역사 화해는 이루어진 셈일까? 그렇지 않다. 역사 화해는 가해국과 피해국이 과거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 죄의 근원을 함께 비판/성찰하여 해체시켜 나가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화해의 '해'(解)는 '화'(和)를 이루기 위한 '해결'뿐만 아니라, 과거에 불화를 일으켰던 죄와 함께 현재의 불화 요인을 '해체'함을 뜻한다. 따라서 역사 화해의 과정에서 가해국과 피해국은 그 '죄와 불화 요인'을 해체하고 제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더 다루기로 하겠다.

화해의 '화'는 '같음, 같아짐'을 뜻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논어』「자로」(子路)의 "화이부동"(和而不同), 즉 '화하되 같아지지 않음'을 뜻한다. 이때 '화'란 오히려 다름을 함의한다. 다름이 존재해야 화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즉 화든 화해든 같음을 구해서는 성립할 수 없다. 서로 다른 타자들이 공존, 공생하고 나아가 상생할 때 그 상태가 화이며 그 과정이 화해이다. 따라서 화/화해의 시공간에선 같음과 다름의 이항대립적 사고/도식이 초극된다. 또 자기와 타자라는 식의 이분법, 이원론도 초극된다. 요컨대 이원/이항대립사고가 초극된다는 말이다.

이원사고는 일상 생활세계에 필요불가결한 기본 사고의 하나이다. 그것은 세상 사물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된다. 세상 사물은 쌍/짝의 둘로 나누어 보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긴 하나 세상 사물은 이원사고에 회수될 수도, 그 논리만으로 설명될 수도 없는 역설로 가득 차 있다. 예컨대 쌍/짝은 대립/상극도 하나 동시에 조화/상생도 한다. 이 같은 역설적 현상/사실을 이원사고와 그 논리는 설명하지 못한다. 특히 서로 조화/상생함으로써 새로운 사물을 낳는다는 현상/사실을 덮어 버리는 것이다. 그런 탓에 이원사고는 필경 '죽음의 사고'가 되고 만다.

이원사고를 초극하기 위해선 화에 바탕을 둔 삼원(三元)사고와 그 논리가 필

요하다. 삼원사고란 예컨대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의 생생화육(生生化育)적 사고이다. 일양일음(一陽一陰)의 도(道)가 천지만물을 낳고 기르며, 살리고 변화시킨다는 화의 원리/논리에 바탕을 둔 사고인 것이다. 음양오행설은 통상 '상생, 상극'의 이원론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그 가운데/사이에 '상화'(相和)의 차원을 넣음으로써 삼원론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12] 음과 양은 서로 다름을 보전한 채 오행을 통해 상극, 상화, 상생한다. 이때 음양의 관계 내지 속성은 '이이일일이이'(二而一一而二), 즉 '둘이자 하나, 하나이자 둘'이다. 또는 '하나도 둘도 아님'이란 '불일불이'(不一不二)이거나 '붙지도 떨어지지도 않음'이란 '불즉불리'(不卽不離)이다.

상화는 상극과 상생의 가운데/사이에서 작용한다. 상극은 인간/자연 세계에서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 사물은 상극하며 상생한다. 거기에 상화라는 제3의 차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상화는 상극과 상생 가운데/사이를 횡단매개하며 상호보충한다. 이로써 쌍/짝은 공매(共媒)관계를 맺는다. 그 공매관계 밑에서는 이중부정과 양면긍정이라는 역설의 논리가 성립한다. 이 역설의 논리는 동일률·모순율·배중률(排中律)과 같은 서양 고전논리학의 3대 원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예컨대 '불일불이'는 이중부정의 논리이다. 이는 영어로 말하면 neither-nor의 문법에 기초한 논리이다. 한편 '이이일일이이'는 양면긍정의 논리로서 both-and의 문법에 기초한다. 이들 두 논리는 모순율에 반함과 동시에 배중률을 넘어선 '포중'(包中)의 논리이다. 그리고 고전논리학의 원리에 회수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굳이 말하자면 비논리적 논리이다. 그러나 세상 사물에 가득 찬 역설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이다. 이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선 이를테면 '공매율'이라는 통

12) 음양설과 오행설은 고대 중국의 전국(戰國) 시대에 발생했다. 한대(漢代)에 이르러 이 두 개의 설이 결합된 것이 음양오행설이다. 오행 즉 화수목금토의 화·목이 양, 수·금이 음, 토는 그 중간이다. 이들의 소장(消長)을 관찰함으로써 천지만물의 변화나 인간계의 길흉(吉凶) 등 만상(萬象)을 설명한다. 오행설에 따르면 상생이란 목이 화를, 화가 토를, 토가 금을, 금이 수를, 수는 목을 낳음을 뜻한다. 한편 상극이란 목이 토에, 토가 수에, 수가 화에, 화가 금에, 금은 목에 각각 이김을 뜻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화수목금토의 오행이 상생, 상극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상호조화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이 상호조화를 줄여서 '상화'라 말한 것이다.

논리(通論理; trans-logic)의 원리가 필요하다. 이런 원리에 기초한 사고가 삼원사고이다. 이 삼원사고는 쌍/짝 가운데/사이를 '맺고 잇고 살리는' 횡단매개성(transversality)을 지향한다.

삼원사고 역시 일상 생활세계에 필요불가결한 기본사고의 하나이다. 모든 인간은 상생, 상극, 상화의 세계 안에 태어나 살아간다. 그래서 누구나 필연적으로 삼원사고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실제로 하면서 살아간다. 그 때문이리라, 삼원사고와 그 논리는 동서양의 거의 모든 사상, 종교, 철학 속에 보편적으로 내재한다. 특히 동양의 전통 사상은 삼원사고에 기초하거나 그 논리/문법을 풍부하게 내포하고 있다.[13] 그런 뜻에서 역사 화해란 '동양 전통 속의 삼원사고를 계발해 나가는 과정'이라 말해도 좋을지 모른다.

5. 역사 화해의 목표

역사 화해를 위해선 가해국과 피해국이 공유할 수 있는 '횡단매개적(transversal)이자 공약가능한(commensurable)' 도리 내지 규범이 필요하다. 역으로 이런 도리를 공유하기 위해서도 역사 화해는 필요하다. 역사 화해는 반일과 같이 자타 공통의 도리를 지향한다. 그 도리를 공유할 때 비로소 반일은 내파되고 또 역사 화해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도리의 공유'는 역사 화해의 궁극 목표인 셈이다.[14] 그렇다면 그 도리의 첫 범주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나는 '반식민주의'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거기에 어떤 국가나 지역이 독점하지 않는 '정의, 인도'를 더해도 좋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화해의 '해'는 과거에 불화를 일으켰던 죄와 현재의 불

13) 예컨대 불교의 '일즉다다즉일(一卽多多卽一), 일중일체(一中一切), 다중일(多中一), 불일불이(不一不二)'나 도교의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으며 셋은 만물을 낳는다(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万物)'(『도덕경』 42장), 그리고 정주학(程朱學)의 '이일분수(理一分殊), 불상잡불상리(不相雜不相離), 이이일일이이'(二而一一而二) 등의 명제를 음미하길 바란다.

14) 일본의 '민법' 695조에 따르면 사법(私法)상의 화해의 요건은 '당사자 간의 다툼, 양보, 합의'라고 한다. 비유하자면 역사 화해의 요건은 '당사국 간의 역사 문제, 양보, 합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요건만으로 역사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도리의 공유'라는 요건이 더해져야 하는 것이다.

화 요인을 '해체'함을 뜻한다. 거기에서 '죄와 불화 요인'의 근원은 다름 아닌 식민주의에 있다. 식민주의는 '지배 – 억압을 정당화/합리화하는 인식/언설'을 표상한다. 이 식민주의를 해체함은 실은 양국을 포함한 세계 공통의 과제이다. 이를 해체하는 과정이 바로 역사 화해라고 말해도 좋다. 이때 식민주의는 결코 과거에 지나간 흔적이 아니며 현재에도 그 모습만 바꾼 채 상존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더욱이 과거의 가해국뿐만 아니라 피해국도 공유하고 있음을 지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역사 화해의 과정에서 해체 대상은 식민주의에 그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비판/성찰하고 초극해야 할 대상이 있다. 예컨대 앞서 언급했던 과거의 망령과 근대의 주박, 그리고 편협한 내셔널리즘. 또한 근대주의와 그 바탕에 있는 이원/이항대립사고, 구미 중심주의, 오리엔탈리즘, 자기/자국중심주의 등이다. 이것들이 여전히 온존하거나 재편된 채 불화 요인을 재생산함으로써 역사 화해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 화해를 추진해 나간다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먼저 상대국에 대한 심리가 불신에서 신뢰로, 증오에서 애정으로, 불안에서 안심으로 전환된다. 이로써 비생산적인 대립과 갈등이 해소된다. 또 상대국에 대한 멸시/무시가 직시/정시(正視)로 바뀌어 서로의 허상이나 거짓, 무지나 무관심이 타파된다. 나아가 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공통의 사상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로써 불행한 과거와 과거를 인질 삼은 현재를 넘어서 '공복(共福)의 미래'를 여는 공공 공간(= 공동체)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된다. 이 밖에도 예측조차 못할 수많은 성과가 파생할 것이다.

여기서 역사 화해와 반일과의 관계를 정리해 보자. 역사 화해의 목표는 반일의 극복을 양국 공통의 사상과제를 해결할 기회로 삼아 반일 자체를 내파하는 일에 있다. 따라서 역사 화해란 '반일로부터 포스트반일에의 시공간을 열어 가는 과정'이라 볼 수도 있다. '포스트반일'의 공간축은 한일 양국인이 벗으로 만나 생성적 대화를 하는 한편 건설적 다툼도 하는 장소이다. 한편 '포스트반일'의 시간축은 문자 그대로 '반일 이후'를 뜻하나 그 '이후'란 과거의 극복을 통한 현재의 결과

로 존재한다. 따라서 그 속에는 장래에의 전망을 촉진하는 계기(moment)와 추진력(momentum)이 포함된다. 즉 역사 화해는 '포스트반일'의 시공간을 열어 새로운 한일 관계사를 엮어 가는 과정인 것이다.

6. 역사 화해의 현안과 방법

1) '한(韓) 지우기' 전통의 해체

한일 양국 간의 역사문제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존재한다. 예컨대 일본에선 고대 이래의 '한 지우기' 전통이 있다.[15] 이 전통은 양국의 집단 의식/무의식 속에 흐르는 '고대의 주박'에서 유래한다고 본다. 그 배경에는 (지금도 풀지 못한 채로 남아 있는) 양국 고대 관계의 사적(史積)에 담긴 수많은 수수께끼가 있다. 이들 수수께끼는 양국의 일국사, 자국중심주의의 닫힘을 넘어선 지역사, 지역주의의 열림을 통해서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고대 이래 일본의 역사, 문화, 사상에서 지명(地名)이나 생활 세계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한'의 흔적이 새겨진 채 지금껏 남아 있다. 이 흔적은 일본인의 심리에 '한'을 향한 동경과 애정을 새기는 한편 그 어긋난 심리로서 '한'에 대한 원한과 증오도 새겼으리라 여겨진다. 그 후자의 어긋난 심리로부터 '한 지우기'라는 전통이 생겼을 것이다. 지금도 이 전통은 일본인의 의식/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채 고대의 주박과 함께 흐르고 있다고 본다. 그것이 '한'의 멸시/무시를 낳고 심지어 침략 의식으로 이어져 간헐적으로 분출되었다고 보아도 좋다. 그렇다면 이를 해체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국을 적어도 세 번 침략했던 셈이다. 첫번째는 『일본서기』(日本書紀)에 기록된 이른바 '진구(神功) 황후의 삼한(三韓) 정벌'이다. 이것은 오늘날엔 사실이 아닌 '조작'된 전설로 여겨지게 된 듯하다. 그렇다 해도 이 전설의 망령이 근본적으로 해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 조작, 전승되었을까? 그

15) 한편 한국에선 '왜(倭) 또는 일본 지우기' 전통이 있다.

배경엔 무슨 역사적 사실이 감추어져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이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추측건대 고대의 한일 간에는 양 지역에 걸친 문화/문명 교류권이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 오랜 교류 속엔 수많은 '한' 또는 '왜/일본'의 흔적이 새겨졌을 것이다. 이들 흔적은 서로의 우호와 다툼을 포함할 것이다. 이때 다툼은 예컨대 '왜/일본'의 '한'에 대한 원한을 새기기도 했으리라. 그렇다면 진구 황후의 전설은 고대의 언젠가 새겨졌던 어떤 원한을 풀고 싶은——달리 말해 '한'을 정벌함으로써 지워 버리고 싶은——욕망을 담은 대상(代償) 행위로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 침략이다. 이는 일본 전래의 '한 지우기'의 전통이 침략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로 인한 심대한 피해나 지금껏 남아 있는 감정의 기억에 대해서 많은 일본인은 무지하거나 둔감하다. 세번째는 '한국병합'이다. 이것은 '한 지우기'의 정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병합'은 당시 일본에서 '진구 황후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위업의 계승'이라는 식으로 선전되었다. 그러한 예는 당시의 신문이나 잡지의 일부만 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고대 이래의 '한 지우기' 전통은 실제로 그 위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 전통을 해체하는 일은 역사 화해의 한 과제에 속한다.

2) '한국병합' 관련 조약의 해석

'한국병합' 관련 조약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유효, 부당'론 즉 '체약 당시엔 합법이었고 따라서 유효했으나, 한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무효가 되었고 또한 도덕적으로는 부당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단 앞서 본 것처럼 간 담화는 '한국병합'과 식민지 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 해서 관련 조약의 강제성이나 무효/위법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체약 당시부터 위법이었고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취한다. 이런 양국(정부)의 입장 차이는 역사 극복과 화해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그러나 '유효인가 무효인가'라는 해석을 둘러싼 (국제)법학 논쟁만으론 현실적으로 그 해결이 어렵다. 이는 장래에도 마찬가지일 듯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은 양국 정부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입장 조정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여기서 나는 '반식민주의에 입각한 원천 무효'라는 해석을 제안해 보고 싶다. 그 취지는 일본 정부에게 (국제)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점에 있다. 그 대신 일본 정부/사람이 여태껏 소홀히 했던 식민지 지배 책임을 '질 만큼' 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점에 있다.

이런 해석을 일본 정부/사람이 취한다면 한국 정부/사람도 환영하고 응답하게 되지 않을까? 양국 간에 용서와 화해의 행동/실천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3) 식민지 지배 책임의 실천

일본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식민지 지배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죄한 '자랑할 만한' 나라이다. 더욱이 간 담화는 식민지 지배 책임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예컨대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그 실천의 한 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한 걸음이 두 걸음, 세 걸음으로 이어지기를, 그리고 한국 측도 '우애'의 손길을 내밀고 역사 화해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기원할 뿐이다.

식민지 지배 책임의 실천은 당연히 양국이 함께 해야 한다. 거기서 법적 책임을 묻거나 배상/보상을 요구하는 일은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정말로 중요한 일은 마음과 뜻의 화해, 그리고 이를 통한 도리의 공유라고 보기 때문이다. 양국이 화해의 마음과 뜻을 행동/실천으로 옮기고자 할 때 그 수단이나 매체는 얼마든지 있다. 예컨대 양국 사람이 공동으로 참배할 수 있는 모뉴멘트의 건설, 양국 수뇌나 각료 등 관계자가 모뉴멘트 앞에 함께 무릎 꿇는 퍼포먼스, 역사 화해를 제창하는 공동 선언, 화해위원회의 공동 설치, 공통의 역사교과서 편찬, 화해의 실천 방법을 논하는 공동회의, 화해의 성과를 얻을 때마다 함께 벌이는 축제, 공연, 강연…….

4) 남북분단의 해소와 냉전사고의 탈피

일본인은 일부를 제외하고 한반도의 남북분단(이하, 분단)의 현실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하다. 물론 분단 책임을 일본만이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분단의 원인도 지속이유도 한반도 내외에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분단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기인함을 망각해선 안 된다. 이런 뜻에서 분단은 역사문제의 한 범주에 속하며 일본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 책임 회피는 식민지 지배 책임에 대한 무감각,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인 셈이다.

분단에 대한 일본인의 책임의식이 약하게 된 배경에는 지금껏 계속되는 동아시아의 냉전구조와 이를 존속시키는 냉전사고가 있다. 냉전사고는 이원/이항대립사고의 전형적인 예이다. 그것은 가상적(假想敵)을 필요로 하며, 필요에 따라 만들어 낸다. 일본의 가상적은 겉으론 북한이지만 속으론 중국이다. 일본에선 북한위협론이 퍼져 있지만 그 속엔 중국위협론이 숨어 있다. 이들 모두 냉전사고를 온존시키고 분단책임을 회피/망각시키는 호재(好材)의 역할을 한다. 역으로 이를 위해서도 분단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어긋난 심리로 이어진다. 그리하여 분단과 냉전사고의 공범관계를 지속시키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분단과 냉전사고는 북한/중국위협론과 함께 동아시아를 배회하는 과거의 망령과 근대의 주박을 덮고, 근대주의와 이원/이항대립사고, 오리엔탈리즘 등을 숨기는 데 이용되어 왔다. 또 권력정치관이나 자국중심주의를 합리화하는 데도 이용되어 왔다. 나아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동맹 체제 밑에서 '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로 군비확장/경쟁을 가속시키는 데도 이용되어 왔다. 이런 현실을 배경으로 일본은 역사 화해를 소홀히 하고 식민지 지배 책임을 회피/망각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은 분단을 해소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을 세우지조차 못하고 있다. 이때 '올바른' 정책이란 '냉전사고를 탈피한, 탈피할 수 있는' 정책을 가리킨다. 오히려 분단을 지속시킬 뿐인 '어긋난' 정책, 즉 '냉전사고를 고수한, 고수할 수 있는' 정책을 거듭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을 뿐이다. 이는 일정 정도 한국이나 미국에도 해당된다. 예컨대 냉전사고를 고수하는 '보수파'의 대북 적대/강경 정

책이 그것이다. 보수파에겐 가상적으로서의 북한이 필요하다. 북한은 위협이며 또 위협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기득권은 물론 존재이유조차 잃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협을 예언하고, 그 실현을 부추긴다. 이를테면 '예언의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셈이다. 하지만 그 실현의 결과는 '자타 공멸'이 아닐까?!

동아시아에서 냉전과 분단을 존속시켜 이에 편승하는 냉전사고를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이제 일본은 대북 적대/강경 정책을 버리고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하여 식민지 지배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북한에게도 표명하거나 또는 이를 일부 표명했던 2002년의 '평양선언'을 재확인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나아가 분단과 냉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공헌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5)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

21세기의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국가의 현실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지역화(regionalization)가 급격히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한·중·일 3국 간에는 경제 교류와 인적 교류와 더불어 한류, 일류(日流), 화류(華流) 등 대중문화의 교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3국 간에도 경제, 문화 등 공동체가 이미 형성되었음을 이야기한다. 다만 이 같은 현실 변화를 수용할 만한 제도화가 느릴 뿐이다. 그럴지라도 3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경제, 문화는 물론 정치·외교·안전보장 부문의 공동체를 구축할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은 '선택지의 하나가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민주당 정권은 성립 당시부터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내걸고 있다. 그 실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중국 등 관계국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는 일만 남은 셈이다. 실은 한국도 중국도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상을 내걸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3국 간의 협의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공동체 구상을 둘러싼 3국의 이해 관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듯하다. 거기엔 역사문제를 비롯한 정치, 외교, 안전보장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을 것이다.

각설하고 여기서 공동체라는 용어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공동체란 community의 번역어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번역의 문제가 따른다. 이를테면 두 용어 사이엔 '언어코드'의 차이가 개재한다는 말이다. common의 뜻에는 '공동'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밖에 '공통, 공유, 보통, 일반' 등이 있다. 그렇다면 community를 '공동체'가 아닌 '공통체'나 '공유체'로 번역해도 좋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로 번역되어 정착된 이유 내지 배경에는 서양과 일본의 근대가 있었다고 본다.

공동체의 '동'은 '같음, 같아짐'을 뜻한다. 거기엔 공동체 내부의 동질성과 그 외부에 대한 폐쇄성이 투영되어 있다. 이로써 공동체 내외의 '다른 요소나 다름'을 억누르고 배제함으로써 단수의 아이덴티티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서양과 일본의 근대에 형성된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그 배경에 근대주의나 이원/이항대립사고가 있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 때문에 community가 '공동체'로 번역되어 정착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공동체'라는 번역어는 (다른 수많은 번역어와 마찬가지로) 근대에 들어 일본에서 '발명'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상할 때 맨 처음 떠오르는 것이 있다. 다름 아닌 1940년대의 '대동아공영권'이다. 그것이 '공영권' 내외의 '다른 요소나 다름'을 억누르고 배제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거기엔 공동체라는 용어의 문제 즉 '동질성'과 '폐쇄성'이 투영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구축할 동아시아 공동체는 '동', 즉 '같음, 같아짐'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동'을 타파하고 해체해야 한다. 다름과 다름이 서로 포용하면서 '함께 일하고 상통하며 상화하는 체(體)'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공동체 대신에 '공통체, 공화체(共和體)' 또는 '공공체'(公共體)라는 용어를 쓸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때 '체'란 고정된 '실체'를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늘 변화해 가는 '동태'를 표상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통태, 공화태' 또는 '공공태'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이 같은 '공통체/태'는 내외로 개방된 새로운 지평을 연다. 그 지평은 지구/지

역/국가/지방의 글로리내컬(global/regional/national/local) 차원을 포함한다. 그래서 지역, 국가, 지방은 이들 다층 차원의 하나로 상대화된다. 이에 따라 '공통체/태'의 구성원은 다층의, 복수의 아이덴티티를 지니게 된다. 국가를 넘어선 지역 공통의 아이덴티티를 지니게 됨은 물론이다. 그러면 동아시아의 장래세대는 복수 아이덴티티를 지니고 지역 내외를 자유롭게 월경(越境)하면서 평화롭게 생활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장래는 어느 나라가 얼마나 많은 '동아시아인'을 산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지 않을까?

7. 맺음말

19세기 후반부터 한일 양국 등 동아시아는 '전통에서 근대로의'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했다. 근대(서양)문명의 지구화 물결이 밀려든 까닭이다. 이에 따라 근대문명은 마치 세계문명의 표준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근대의 지구화는 내셔널리즘과 식민주의를 세계로 확산시키는 과정을 동반했다. 즉 산업화와 민주화, 자유와 진보를 상징하는 한편 폭력과 차별, 지배와 억압을 긍정하는 모순적 이중성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근대는 정과 부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근대의 지구화에 적응하려 했던 양국의 근대화도 모순적 이중성을 띠고 있었다. 이를테면 근대에 대한 '동조와 저항'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모순은 근대의 힘에 눌린 채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한편 근대에 저항했던 양국의 전통은 점차 제자리를 잃어 갔다. 그 빈 자리에는 서양/근대라는 타자 또는 그 대변자가 들어섰다. 또한 내셔널리즘, 식민주의와 함께 근대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이 침투했고, 그 바탕에 깔린 이원/이항대립사고도 퍼져 나갔다. 그리하여 양국은 '근대 특히 그 부의 주박'에 걸린 채 이를 재생산하는 인식/언설에 지배되어 온 셈이다.

물론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은 저항만 아니라 동조도 했다. 그런 뜻에서 근대화는 전통과 근대의 이종교배(hybridization)의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각각의 전통과 근대가 지닌 '정의 융합과 부의 극복'이란 실험을 시도하기도 했

다. 그러나 이 실험 역시 근대의 힘에 눌린 채 별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로써 '전통은 부, 근대는 정'이라는 이분법과 함께 전통의 왜곡도 퍼져 나갔다. 이런 시기에 양국은 협조/연대보다 갈등/대립을 키웠다. 그 결과 '불행한 역사'를 기록했고 감정의 기억을 심층심리에 새긴 채 계승시켰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 동아시아는 새로운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한 듯 보인다. 근대 문명과 이를 계승한 현대 문명이 곳곳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탓이다. 이미 근대 문명은 세계 문명의 기준이 아니다. 오히려 20세기 후반부터 맹렬한 비판 대상이 되어 버린 상태이다. 오늘날 근대 비판은 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가속될 전망이다. 예측건대 이원/이항대립사고에 바탕을 둔 근대주의는 극복되고 근대의 주박은 초극될 것이다. 식민주의의 역사는 비판되고 역사 화해의 지평이 열릴 것이다. 그리하여 21세기는 반식민주의와 화해의 세기가 될 것이다.

21세기는 동아시아 부활의 세기가 될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고속 성장'이나 '중국의 부상(浮上)'으로 상징되듯 동아시아는 '부활'하고 있다. 그 '부활' 뒤에는 물론 일본의 저력도 있다. 그러나 자만할 때는 아니다. 그 '부활'은 무릇 근대화의 성공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주의할 것은 근대화는 근대의 '정'(正)뿐만 아니라 '부'(負)의 수용을 동반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근대주의를 키우거나 근대의 주박을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는 점이다. 동아시아가 진정으로 부활하려면 자기의 근대(화)에 대한 비판/성찰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자기 전통에 대한 비판/성찰도 필요하다.

한일 양국은 자국 전통에 대한 무지를 자각하고 이를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통을 올바로 비판/성찰함으로써 그 속에 담긴 정의 유산을 새롭게 발명하고 되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서구중심적인 지/권력의 편중을 바로잡고 양국이나 동아시아의 현장성(actuality)에 맞는 공공지(公共知)를 계발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동서양의 지적 대화와 융합의 지평을 열어 나가야 한다. 이런 뜻에서 근대주의를 극복하고 근대의 주박을 초극해 나가는 일은 실로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장래를 가늠하는 '인류 공통의 사상과제'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문명사적 대전환기의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채 더 이상 반일과 혐한의 적대적 공범관계를 내버려 둘 수 없다. 과거의 망령과 과거를 인질 삼은 현재는 지금의 우리 세대가 짐지는 것만으로 족하다. 역사문제를 다음 세대로 넘겨줄 수는 없다. 이 같은 의지로 양국은 하루라도 빨리 근대의 주박을 초극하고 역사화해의 지평을 열어 나가야 한다. 장래세대는 양국 간의 '공복(共福)의 역사'를 많이 기록해 줄 것을 기원하면서 말이다.

적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우선 「엑스포70 동경작전」(1970)과 「돌아온 팔도강산」(1976) 두 편의 영화에 대한 담론분석을 통해 국가나 민족 등의 근대 개념의 이데올로기적 규범성을 심문하는 존재로서 디아스포라를 재정립한다. 그리고 '누가 디아스포라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문제의식 아래 한국 내셔널리즘(nationalism)과의 관계 속에서 재일조선인을 둘러싼 정치의 한 측면을 밝혀 보고자 시도했다. 이를 통해 한국 영화의 재일조선인 표상은 국가의 국민적 기억 만들기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점과 한국의 내셔널리즘에 내포된 모순을 품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젠더규범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국가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경제·정치적 측면에서 필요로 해왔다. 그러나 거기에는 동시에 국가나 민족 등의 근대 개념을 다시 묻는 기제도 존재했다. 또한 젠더질서도 표상에 반영되어 왔다. 국가가 디아스포라를 필요로 해왔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야말로, 재일조선인이나 재외동포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각일 것이다.

주제어: 재일조선인, 디아스포라, 내셔널리즘, 영화, 젠더

반일과 역사 화해 | 김봉진

투고일자: 2010년 11월 30일 | 심사완료일자: 2010년 12월 17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1월 13일

본 논문은 한일 간의 역사문제를 풀고 '불행한 역사'를 극복할 방법을 탐구하기 위해 '반일과 역사 화해'라는 문제를 재고하고 있다. 먼저 반일 속엔 양의적이자 모순된 성향과 일본을 향한 욕망과 조리가 담겨 있다고 본다. 달리 말해 반일은 일본에 대한 신뢰/불신과 애증의 양면감정에서 생긴 성향인 것이다. 그 진정성은 일본의 부(負)의 유산에 대한 비판·성찰을 촉구하는 일에 있다. 다음으로 반일의 궁극 목표는 반일의 내파에 있다. 따라서 일본은 반일을 문제가 아닌 찬스로 삼아 그것과의 '생성적' 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역사 화해란 가해국과 피해국이 역사 극복의 도정을 함께 걷는 과정이다. 거기엔 사죄와 용서, 그리고 마음과 뜻의 화해가 필요하다. 이로써 죄와 불화 요인을 해체하고 제거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원·이항대립 사고는 초극되어야 한다. 그 대신 화에 바탕을 둔 삼원사고와 그 논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역사 화해의 목표는 '횡단매개적이자 공약가능한' 도리의 공유에 있다. 그 도리의 첫 범주는 '반식민주의', 즉 식민주의의 해체이다. 이와 함께 과거의 망령과 근대의 주박, 근대주의와 자기/자국중심주의 등도 해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역사 화해의 현안과 방법으로서 '한(韓) 지우기' 전통의 해체, '한국병합' 관련조약의 해석, 식민지 지배 책임의 실천, 남북분단의 해소와 냉전사고의 탈피,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 등을 제안한다.

주제어: 반일, 화해, 역사문제, 반식민주의, 이원·이항대립 사고, 삼원사고, 근대의 주박, 해체

issues: the representation of zainichi as a simultaneous creation by a nation-state, along with the makings of the nation's collective memory that are apparent in Korean movies; the representation of zainichi that embraces contradictions within Korean nationalism; and the gender norms that strongly operate within these movies. A nation-state has always needed Korean diaspora for both economic and political reasons. It is needless to say that politico-economic aspects were operating behind the representation of diaspora who were being the subjects of either exclusion or inclusion, but at the same time, there has been a system through which the modern concepts, such as "nation-state" or "nation," were repeatedly questioned. Therefore, it would be an important insight on the studies of both zainichi and oversea Koreans, when we take a critical approach by arguing that a modern state actually "needed" the diaspora.

Keywords : Zainich, diaspora, nationalism, movie, gender

Korea's Anti-Japan Sentiment and the Reconciliation of the History _ KIM Bong Jin

This paper reexamines two topics, Korea's anti-Japan sentiment and the reconciliation of the history, in search of the solutions for the historical conflicts in order to overcome the 'unhappy' history between Korea and Japan. First of all, I believe that, within Korea's anti-Japan sentiment, there is a sense of ambivalence and contradiction, as well as the desire and the logical admiration toward Japan. In other words, the anti-Japan sentiment evolves from the dualistic nature of trust and distrust, as well as love and hatred, toward the neighboring country. In essense, these conceptions are to encourage Japan to criticize and reflect her own negative legacies. Secondly, I will argue that the ultimate goal of the anti-Japan sentiment lies in its implosion. Therefore, Japan must consider it as a chance, rather than as a problematic issue, in order for the "generative" dialogue to take place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reconcile with the historical issues is a process through which the two nations make a journey together. We need apology and forgiveness, as well as the heartful desire for a true reconciliation. In doing so, all the factors that cause this disharmony must be deconstructed and annihilated. In this process, we need to think three-dimensionally in order to create harmony, rather than being overwhelmed by the dualistic/dichotomic way of thinking. Above all, the goal of reconciliation is to hold the 'transversal' and 'commensurable' morality in common. The first category of this morality is anti-colonialism, i.e. the deconstruction of colonialism. And we also have to overcome the ghost of the past, the curse of the modernity, modernism, and egocentrism. Lastly, I suggest several issues and methods for reconciliation, whicn include: the deconstruction of the traditional tendancy to "erace" Korea; the reinterpretation of the agreements related to 'Korean Annexation'; the actions to be taken in order to discharge responsibility for the colonial rule; the solutions for the "divided peninsula" and the overcoming of the Cold-War ideology; and the construction of the East Asian Community.

Keywords : anti-Japan, reconciliation, historical issues, anti-colonialism, dual/dichotomic thinking, three-dimensional thinking, the spell of the modern/modernity, deconstruction